

“기무사 병력 30% 감축…해체 수준 개혁”

‘존치·분부화·외청 독립’
軍기무개혁위, 3개안 권고
대통령령 등 모든 법령 제정
시·도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2일 기무사
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권고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
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
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
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
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
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
문화화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
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
국 사·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
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현 기무사
령부 체제 유지하에 근본적 혁신을 하는
방안은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정치 불
개입 및 현역군인 동향 사찰 금지 시스템
을 구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 안이 채택된다면 기무사는 일단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개
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기
무사의 현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
다.

국방부본부 체제로 소속이 변경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되면 기무사는 간판을 내려
야 한다. 국방부의 조직 가운데 하나인 국
방정보본부처럼 국방장관의 참모조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현재 상황으로선 국
방부본부 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
청’으로 독립은 국회 논의 등 거쳐야 할 절

차가 많아 사실상 채택 가능성이 낮다. 기
무사가 오래전부터 ‘외청’ 독립을 희망해
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무사 개혁위 관
계자는 “외청으로 가는 안은 어려운 것”이
라며 “참고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
통령에 대한 독대보고(대면보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는 기
무사의 안하무인적 ‘특권의식’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정기
적인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면서 국방부 장
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도 기무사령관

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무
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보고 행
위가 이뤄질 수 있는 지휘 체계는 필요하도
는 입장을 제시했다.

여기에 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
인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동향관
찰’ 금지도 권고했다. 일선 부대에서 기무
사 요원들이 ‘위력’을 행사해온 것도 따지
고 보면 동향관찰 권한 때문이었다. 군 관
계자들은 기무부대원들의 특권의식이 동
향관찰에 따른 ‘동향보고서’ 작성 등 거의
‘사찰’에 가까운 ‘뒷조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법부 ‘변화의 바람’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주류 보수→진보

김선수(57)·이동원(55)·노정희(55)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취임하면
서 사법부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개혁
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
법관 교체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고려하면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
워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속속 퇴임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
관들이 빈자리를 메우면서 우선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대법 3부가 심리 중인 이재용 삼
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심 선고
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 돼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사안의 중대
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

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대
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
다.

보수색이 열린 새 사법부가 전원합
의체 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
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또 ‘사법농단’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
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
건의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
다.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
가를 받았던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심리
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중인
사법제도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법원-고등법원 이
원화’ 및 ‘고법부장제도 폐지’ 등 법관인
사제도 개혁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됐던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허
가제 제도입 논의와 함께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송영무 국방장관 거취 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는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
질설과 관련, “송 장관의 거취가 (경질
로) 급선화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
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장관의 거취 문제
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는
전날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인사권
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최종 인사권자인 문
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송 장
관의 경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이를 연속 해명에 나서는 것
은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특정
장관의 교체설이 불거지는데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이날 ‘국방개
혁 2.0’의 핵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최종 개혁안을 보고받고 이 안을 토대로
오는 6일 국정에 복귀하는 문 대통령에
게 보고할 예정으로 이후에 거취가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현 시국 대비계획…기무사, 제업 시행 준비

압수 USB 내용 확인…문건 작성 TF 운영위 활동기록 삭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
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난달 16
일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계엄시행준
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수사경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문건이 저장돼 있던 기무사의)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
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며 “복구된 파일에 계엄 시행 준
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
하고, 압수를 분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수단은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
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
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
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무
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
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예산, 별도 장소를 확
보했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했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
기를 포맷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작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한 TF는 은밀하면서도 독립적으
로 활동했고 활동기록 삭제도 시도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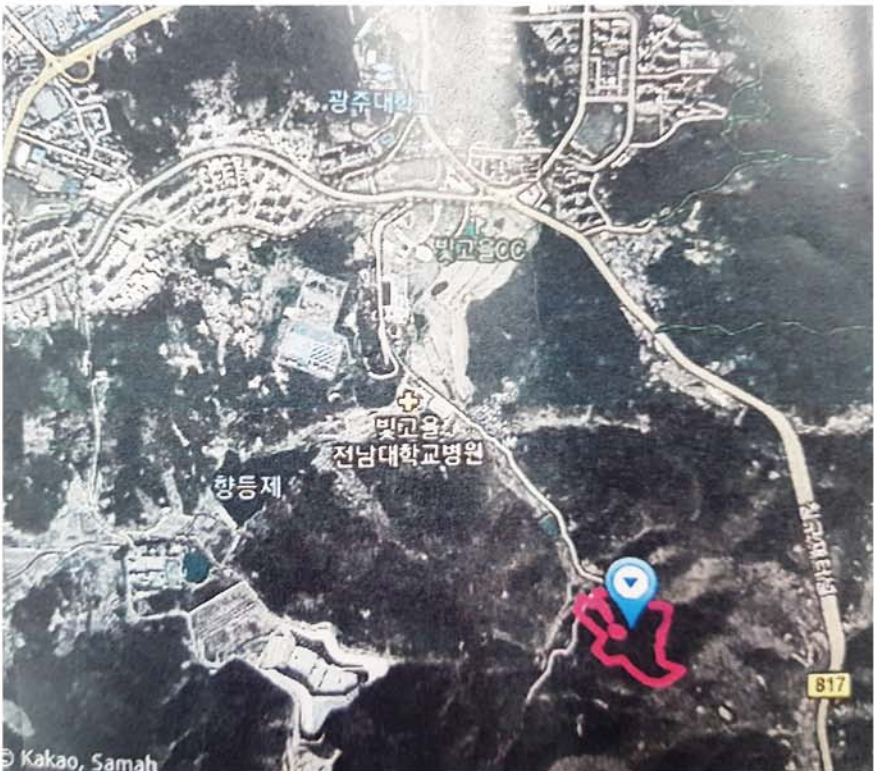
특수단은 지난달 16일 수사를 시작한 이
후 지금까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TF에 참여한 16명을 포함해 기무사 관계
자 25명을 소환 조사했다. 또 기무사령부
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특수단은 아울러 2014년 4월 세월호 참
사 이후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및 업
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 분석했
으며, 그 결과 기무사의 유가족에 대한 조
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
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
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
다”며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유가족의 학
력, 전화번호 등 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